

삼성 바이오 2사 구름 걷히나

# 브라질과 국내 첫 PDP 체결... '브렌시스' 공급

(3자간 파트너십)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라질,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2021년 시장 규모 297억에 달해  
최초 10년동안 브렌시스를 공급  
이후 매출액 일정 부분에 로열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브렌시스'를 공급하는 파트너십(PDP)을 브라질 보건부와 마무리 짓고, 브라질에 브렌시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기업이 브라질



브렌시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서 파트너십(PDP)을 통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PDP'는 브라질 정부가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와 브라

질 제약 회사 및 국영 연구기관이 3자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는 제품 생산 기술을 브라질 제약회사 및 연구기관에 전수하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브라질에선 '엔브렐'과 '휴미라' '레미케이드'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90% 이상이 PDP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브라질 제약사인 '바이오노비스', 브라질 보건부 국영재단 산하 연구기관인 '바이오앵귀노스'와 3자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초 10년동안 브렌시스를 공급하고 이후 10년은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로열티를 받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프로세스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인정받게 됐으며,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들을 통한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9.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2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브라질의 에타너셉트 성분 의약품 매출은 약 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브라질에서 지난 2017년 '브렌시스'의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벤플렉시스', 올해 5월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엔 세계 2위 제약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최대 바이오 제약회사 중 하나인 3S바이오, 중국 최대 헬스케어 벤처펀드 운용사인 C-브릿지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를 협업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기각... 삼바 제재 효력정지 유지

## 삼성바이로직스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유지

삼성바이로직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

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올해 1월 서울 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1심적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이동걸 "산은·수은 합병 건의할 것"

(산업은행 회장)

"정책금융 분산, 바람직하지 않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10일 기업금융 분야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합병해 훨씬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고, 될성부른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며 "정책금융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은과 수은의 합병은 정부와 전혀 협의된 게 아닌 사견"이라며 "내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두 기관을 합치면 백오피스 인력이 줄고, 예산이 늘어 IT 설비를 강화할 수 있고, 남은 인력을 영업 현장에 보내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산은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서는 "산은이 해외로 팽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며 "쓸데없는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명절 앞두고 붐비는 한복점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위치한 한복점에서 시민이 한복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 文 정부 5번째 소상공인 대책은 '온라인·스마트화'

급변하는 트렌드에 선제적 대응  
V-커머스, 홈쇼핑 진출 비용 지원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10일 나온 소상공인 대책은 온라인·스마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및 유통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4년 당시 4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엔 113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활용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온라인 홍보·판매, 영상제작, 광고비 지출 등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 자리에서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도 두 차례나 월간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의 활용 역량과 상품성을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완하고 V-커머스, 홈쇼핑 진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활용 정도에 따라 A그룹부터 D그룹으로 분류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A그룹)→소상공인 전담샐러리 지원(B그룹)→디자인·전문가 코칭 등 상품성 개선기회 제공(C그룹)→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온라인 진출 지원(D그룹)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TV홈쇼핑·T커머스 입점 및 수수료 지원도 올해 200곳에서 내년엔 300곳으로 늘린다. 올해 200곳을 대상으로 한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도 내년엔 1000곳으로 5배나 늘린다.

또 인터넷 쇼핑몰이 판촉비용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분야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고쳐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관련 논평에서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